‘독도 분노’ 日 교류 속속 중단

광주시·전남교육청, 청소년 체험·연수 등 취소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분노가 일본과 교류 중단으로 번져가고 있다. 자치단체와 교육기관들이 시민들의 반일 감정을 고려해 당초 예정됐던 연수와 청소년 교류 등을 잇따라 중단하고 동남아 등 다른 국가로 대상지를 변경하고 나섰다.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각계의 규탄 목소리도 더욱 고조되고 있다.

광주시는 17일 “25일부터 4박5일 일정으로 예정된 청소년 일본 문화체험활동을 전격 취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일본 교과서 독도 영유권 명기로 반일 감정이 극에 달한데다 정부에서도 강경 대응 방침을 내놓음에 따라 교류단의 안전문제 등을 고려, 자체 논의를 거쳐 취소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최근 광주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일본 문화체험을 위한 국제교류 참가자를 공모해 18명을 최종 선발하고 사전 교육까지 마쳤다.

시는 참가 대상 학부모에게 경위를 설명하고 이미 납부한 경비는 환불해 주는 한편 올 하반기에 일본을 제외한 동남아국가 중 한 곳을 택해 국제교류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전남도교육청도 교육청 주관 일본 연수를 무기 연기하거나 타 지역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 유치원 교사 13명을 대상으로 다음달 중순께 실시할 예정이었던 도쿄지역 유치원 방문연수를 취소하고 싱가포르로 변경했으며, 다음달 7~13일로 계획됐던 특수교육 담당교사 일본 연수도 취소됐다. 도교육청은 아울러 지역 교육청과 각급 학교도 일본 방문과 시기, 방법 등을 재검토하도록 긴급 지시했다.

일본 지자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목포, 여수, 나주, 구례 등 전남지역 시·군은 아직 결연 중단등의 결정을 하지않았지만 주민·공무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특히 ‘저팬 타운’ 조성을 추진해온 목포시는 다음달 1일부터 열리는 목포해양문화축제에 일본 벳부시가 3개 부스를 설치하기로 했으나 반일 감정이 고조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곤혹스런 표정이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각계의 규탄 성명도 줄을 이었다. 전남지역 시민단체 연합체인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화순YMCA 등은 17일 성명을 통해 “일본이 중학교 사회교과서 해설서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한 만행에 형언할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국민과 함께 저항운동을 펼쳐나갈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재향군인회(회장 성해석)도 18일 오후 광주시 남구 동 광주공원 앞 광장에서 향군 임직원, 여성회원, 광복회, 6·25참전 용사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 독도 침탈 기도 망동 규탄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초등생들도 독도 배운다

2011년부터

2011년부터 국내 초등학교 6학년생이 배우는 사회 교과서에도 독도 관련 기술이 포함된다.

17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지난해 초 고시된 2007년 교육과정 개편안에 따라 최근 발행된 교육과정 해설서에 초등 6학년 사회과 교육과정에 독도 관련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다.

해설서 중 독도 관련 내용이 등장하는 부분은 세계 각국의 갈등에 대한 교육과정을 설명한 부분으로 ‘우리나라와 관련된 분쟁으로서 독도를 둘러싼 영토분쟁’이 예시의 하나로 적혀 있다.

교육과정 해설서는 개정된 교육과정의 목표, 방향, 내용을 일선 학교 교사, 교과서 집필자들에게 보다 상세히 알리기 위한 일종의 지침서를 말한다.

현행 초등학교 도덕, 생활의 길잡이 등의 교과서에는 ‘국토사랑’을 강조하는 학습자료로서 독도 사진 정도만 실려있으며 독도에 대한 본격적인 기술은 중학교 교과서부터 등장한다. /연합뉴스

“한글 배웠어요” 17일 오전 광주시 남구 월산동 금호 평생교육관에서 열린 ‘2008 상반기 외국인을 위한 한글교실’에 참석한 외국인 여성들이 수료식을 마친 뒤 박수를 치며 활짝 웃고 있다. 외국인 한글교실은 초·중급반으로 나눠 20주간 진행됐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성추행 피해 초등생·학부모들 교육감·가해 교사 상대 손배소

교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초등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교육감과 가해 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17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따르면 여수 모 초등학교 분교 4, 5학년에 다니는 A(12)양과 B(11)양 등 여학생 4명과 학부모들은 A양 등이 교사 C(51)씨로부터 지난 2006년부터 올 초까지 성추행을 당했다며 전남도교육감과 C교사를 상대로 1억6천1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난 15일 제기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교내 안팎에서 2년여에 걸쳐 제자들을 성추행한 교사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교육감에 있고, 가해 교사가 알코올에 의존한 수전증이 있는데도 해당 학교에 발령을 내 성추행 사건을 발생케 했다”며 “교육감과 가해교사는 연대해 피해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순천지원은 이 사건을 제1민사부에 배당했으며 3~5개월 내에 재판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학교 안에서 벌어진 교사의 불법행위와 관련한 교육청의 책임 여부와 책임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 액수가 재판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지광현기자 light64@

“미 쇠고기 시민 감시단 운영하자”
“독도 영토권 유린 적극 대처해야”

광주·전남 촛불 향방 논의

미국산 쇠고기 유통을 막기 위해 ‘시민 감시단’을 운영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전남지역 2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반대 광주·전남 비상시국회의’는 17일 오후 광주 YMCA에서 ‘촛불은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촛불집회와 쇠고기 정국 향방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서영옥 광우병 대책위 사무국장은 “원산지표시의무대상 업소가 전국적으로 66만개에 이르지만 단속요원은 1천여명에 불과하고,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며 “회사와 병원, 학교 등에서 자체적으로 감시단을 조직해 미국산 쇠고기의 판매와 유통을 감시하자”고 제안했다.

또 “쇠고기 생산자, 판매자, 소비자가 참여해 미국산 쇠고기 안전지대를 선언하고,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실질적인 원산지 표시단속을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촛불집회 방향에 대해서 발표한 이신 통일사회연구회 회장은 “촛불집회가 장기화되면서 시민들이 피로감을 느끼는 등 돌파구 마련이 필요하다”며 “생활공간에서 촛불집회를 지속하면서 다음달 5일 부시 미국 대통령 방문과 15일 광복절에 집중해 대규모 촛불집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 소장은 “촛불민심이 일본의 독도 영토주권 유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촛불집회가 국가의 자주권을 지키는 투쟁이듯이 독도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국민이 결집해야 한다”며 “중립을 지키는 척하는 미국을 압박하고, 굴종외교·무능외교 행태를 보이고 있는 정부의 책임을 묻자”고 밝혔다. /안현주기자 ahj@

45억 탈세 ‘유흥깡’ 업자 대거 적발

‘바지사장’을 내세워 유흥업소의 세금 포탈을 돕고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이른바 ‘유흥깡’ 업자들이 검찰에 대거 적발됐다.

광주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17일 유흥업소들을 대신해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수법으로 세금 포탈을 돕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조모(45)씨 등 6명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윤모(41)씨 등 달아난 업자 2명을 지명수배하고 세금을 포탈한 유흥업소 업주와 바지사장 등 4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바지사장을 내세워 유흥업소 사업자 및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을 한 뒤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광주시 상무지구 일대의 유흥업소 36곳을 대신해 술값 240억원을 결제해 줘 45억원 상당의 세금이 포탈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해당 유흥업소들은 매출액의 30%대에 달하는 세금을 내지 않는 대신 술값의 13%를 조씨 등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건넸으며, 이 돈은 일부만 카드사에 수수료로 지급되고 나머지는 조씨 등이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실제 업주 대신 경제적 능력이 없는 바지사장들에게 부과된 세금은 대부분 결손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권일기자 cki@

승용차 충돌 2명 사망

지난 16일 밤 11시30분께 광주시 남구 대촌동 대촌4거리에서 박모(22·나주시 산포면)씨가 몰던 전남 53가43XX호 스포티지 승용차가 임모(37·영암군 도포면)씨가 운전하던 승용차와 부딪쳤다.

이 사고로 임씨와 임씨의 아내 최모(32)씨가 현장에서 숨지고, 뒷 좌석에 타고 있던 임씨의 아들(3)은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짝퉁 판매 9명 적발

광주동부경찰은 17일 해외 명품브랜드 위조품을 판매한 김모(여·27·광주시 북구 임동)씨 등 9명을 상표권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김씨 등은 최근 1년 동안 광주시 동구 금남로와 충장로 일대에서 잡화점을 운영하면서 샤넬, 루이비통, 프라다, 구찌 등 해외 명품브랜드를 위조한 가방과 지갑 등 수백 점을 구매해 10배 이상 부풀려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현주기자 ahj@

30대 취객, 경찰서에서 나체 쇼

쌍나팔

○…30대 취객이 광주시내 경찰서에서 고함을 지르고 속옷을 벗은 채 활보하는 등 한바탕 소동.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이모(38·북구 용봉동)씨는 지난 16일 밤 10시40분께 광주북부경찰서 청사 1층 민원실 앞에서 행패를 부린 뒤 민원실에서 야간 근무 중이던 여직원에게 자신의 은밀한 부위(?)를 보여주며 심한 욕설을 내뱉는 등 5분 동안 난동을 부렸다는 것.

○…이씨는 민원실 앞에서 난동을 부렸으나 이를 본 직원들이 저지하자 홧김에 자신의 바지를 내렸는데, 경찰에서 “술을 깨려고 경찰서를 찾았는데, 직원들이 잘 받아주지 않자 화가 났었다”고 진술.

○…이씨는 비명소리를 듣고 곧장 달려온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붙잡혔으며, 경찰은 이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입건. /이종행 기자 golee@